

나주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헛구호'

LH 개발계획 변경안...분양가 인하 효과 미미·전남도 건의도 묵살

산학연 클러스터 미분양 사태 우려

정부가 자족기능 강화를 내세워 추진했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이 말만 앞선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혁신도시 분양가를 인하고 산학연(産學研) 클러스터(cluster) 용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지만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는 거리가 먼데다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LH(토지주택공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 3차 변경안을 지난달 초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번 변경안은 15개 공공기관의 최종 이점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부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내놓은 혁신도시 발전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시킨 게 골자다.

혁신도시 전체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17개에서 15개로 줄어듦에 따라 공공기관 부지를 75만3420㎡에서 71만6570㎡로 3만6850㎡ 줄였고 공원·녹지 면적도 당초(25.4%)보다 0.4%(3만5008㎡) 줄여 최소 녹지율(25%)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변경했다.

또 혁신도시 골프장 내 단독주택용지(페어웨이빌리지)의 경우 경기철체 등으로 분양이 힘들 것을 우려, 당초보다 3분의 1 수준(9만8739㎡→3만2300㎡)으로 축소했다. 대신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당초(36만178㎡)보다 8만7603㎡ 확대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취지에 맞춰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공원·녹지' 면적을 조정, 클러스터 용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상 공급면적을 확대해 용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맞춰 재설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변경안은 녹지 조정 비율이 0.4% 수준에 머무른데다, 면적 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666억)도 전체 사업비(1조4841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형편이어서 정부가 애초 밝혔던 '평균 분양가 14.3% 인하'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LH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혁신도시 건설 시행사들조차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조성원가가 평균 149만원 수준이 유지되면서 교통 등 불리한 입지 여건을 고려하면 수도권 및 충청권에 견줘 경쟁력도 높지 않아 자칫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녹지 면적도 최소 면적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 친환경 전월도시로 가꾸겠다는 구호가 '색색내기'라는 비판도 많다.

정부는 전남도가 '3.3㎡당 149만원'인 조성원가를 109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요청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4000억원)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국가가 매입해 임대 전용산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측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청한 건의안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는 것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첫 인상이 좋아야... 전남대학교가 취업시즌을 앞두고 6일 교내에서 개최한 '2010 취업 두드림 한마당 행사'에서 여학생들이 면접시 호감 가는 첫 인상을 만들기 위한 복장과 머리 스타일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분양률 19%에 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및 민간 용지 분양률이 평균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허전 의원이 6일 LH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혁신도시별 용지매매 체결현황'에 따르면 LH가 시행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조성된 유상공급 토지 158만1000㎡ 중 7월 말까지 30만㎡(18.97%)가 분양됐다.

1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곳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국전과

진흥원, 농업연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7곳(46.66%)에 불과했다.

이주자들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분양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17만8000㎡(530억원) 가운데 3만8000㎡(109억)만 분양되는데 그쳤고 공동주택(63만5000㎡) 가운데 분양된 땅은 10만8000㎡(17.0%)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부지 매입 및 청사 착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각종 분양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區간 경계조정 재추진

강운태시장 "균형발전·국회의원 정수 유지 위해 꼭 필요"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 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과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해 구(區)간 경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지역 최대현안이 되어 온 구간 경계조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강 시장은 6일, 민선 5기 들어 처음으로 동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태명 동구청장이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구간 경계조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자 "전폭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동구의 인구는 지나치게 적은 반면 북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주민편의와 자치구간 적절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간 경계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도 광주지역 국회의

원 정수 유지 등을 위해서는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의원 정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명이라도 광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더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이며 정치인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광주시가 앞장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인들과도 협의하겠다. 성사되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인구 증감으로 일부 구 지역에서 1~2명의 의원 정수 유지가 위태로워지고 지역 간 불균형도 심해져 경계조정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의 이해가 엇갈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5월 말 현재 동구의 면적과 인구는 47.86km에 10만2078명으로, 121.75km의 면적에 46만7881명의 인구를 가진 북구에 비해 면적으로는 39% 인구수는 22%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동구와 남구 등 2곳만이 국회의원 정수가 1명이며 서구와 북구, 광산구 등 2명씩이다.

강 시장은 또 동구청이 건의한 특별재정보전금 110억원 지원과 관련해 "110억원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공무원 인건비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하반기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민주, 당·대권 분리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

전당대회 를 확정

민주당은 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5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결정한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 등 '전당대회 룰'을 인준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전준위는 지난 5일 자정 무렵까지 토론을 거듭한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오는 10월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해 선출하는 순수집단지도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전준위는 찬성 13표, 반대 12표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 등 지도부로 선출된 인사가 대권에 도전하려 할 경우 대선 1년 전 지도부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방식은 '대의원 투표 70%+당원 여론조사 30%'방안이 13대 12의 표결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대의원의 투표권은 1인 2표제가 도입되며 지도부에 도전하는 인사들이 15명에 육박하는 만큼 오는 9일 컷-오프를 통해 후보군을 9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한편,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에 따라 당내 486 인사들의 지도부 진입은 더욱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당권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감사원 공무원 인사 특별 감사

지자체 특채도 대상

감사원이 유명한 전 외교장관의 딸 특채로 불거진 공무원 임용 과정상 비리 의혹과 관련, 조만간 공무원 채용 등 인사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은 금년 하반기에 공직 인사 비리에 대한 비리 점검 계획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에도 공무원 특채과정 등에서 비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내다보며 전방위 감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또 공직 사회의 인사 관행과 비리, 불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인사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계획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공무원 인사 전반에 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그와 관련해 금주부터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 채용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관심을 끌게 될 것 같다"면서 "감사 착수 시기가 규모 등은 자료 수집 결과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위직은 자체 감사 기구에서 하고 자치단체장이나 고위공직자 등 고위직은 감사원에서 관심을 갖고 비리가 적절할 수 있도록 더욱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2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무리한 사람 심기 수단으로 특별채용이 이용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휴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편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주아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인원
* 객실 : 전 객실 50% 할인
* 뷔페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일순연 · 각종 세미나 (대·중·소회의장 완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선택의 즐거움, 가득한 기쁨 - **금강상품권**

하나의 상품권으로 30여 개의 유명브랜드를 선물하세요

금강 인터넷 쇼핑몰 www.kumgangmall.com
전국 어디서나 1588-8877

DM 금강상품권

REGAL renoma ESPERDOR Renoir BALenciAGA PARIS Clarks LANDROVER Timberland Buffalo Koalabi HH Kumgang 금강제와 www.kumgang.com